

# 제20차 중-ASEAN 정상회의 평가

이지용 계명대학교 교수

## 주요내용

- (현황) 2017년 11월 1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20차 중-ASEAN 정상회의(ASEAN+1)가 개최됨.
- (원인과 분석)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협상에 양자가 보다 노력하고, 여타 참여국들의 적극적 협상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RCEP 협상 타결을 추진함.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서는 2017년 8월 아세안과 중국의 외교장관이 채택한 남중국해 행동규범(Code of Conduct) 초안을 발전시켜 행동규범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한 협상에 임하기로 합의함.
- (전망과 시사점) 중국과 아세안 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통상의 수월성 제고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중국의 아세안 지역에 대한 경제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중국의 동남아 인프라 투자 확대,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 자유무역협정(RCEP) 추진 등, 투자와 통상제도 측면에도 협력이 가속화될 것임.

## 1. 이슈 현황

■ 2017년 11월 1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20차 중-ASEAN 정상회의(ASEAN+1)가 개최되었음.

□ 이번 중-ASEAN 정상회담은 개최국인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과 중국 리커창 총리가 공동 주재하는 가운데 진행되었음.

■ 2017년은 ASEAN 창설 50주년이 되는 해이고, 20차 중-ASEAN 정상회의는 시진핑 집권 2기 이후 중국이 아세안과 개최한 첫 번째 회의로서 중국의 ASEAN 정책과 ASEAN의 대중 정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함.

■ 19차 전대(중국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시진핑이 2050년까지 중국의 대외전략 방향과 목표를 선언한 가운데 중국이 아시아 지역 정치경제에 확장 진출하는 포석으로서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 설정과 협력 내용이 중요한 의미를 시사하고 있음.

■ 중국이 지역 정치안보, 경제 등에 영향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요 이슈와 관련해 아세안 국가의 반응과 합의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이 추진 중인 '일대일로'의 해양 실크로드 구축 사업에서 아세안 국가들의 적극적 반응과 참여 유도, 그리고 이와 관련된 중국의 구체적 사업추진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이 남중국해 확장 진출 및 자국 영해권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과 관련한 조정 및 합의가 향후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설정에 중요함.
- 지역 경제 질서와 관련해 중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와 자유무역 협정 등이 논의되었음.

## 2. 20차 중-ASEAN 정상회의 결과

■ 정상회의 개최 후 발표된 중-ASEAN 정상회의 의장국 성명에서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중-ASEAN이 '중-ASEAN 전략적 동반자관계' 공동성명을 실행하기 위한 '2016-2020 액션플랜' 실행을 통해 양자 간의 정치안보, 경제, 사회·인문 교류를 더욱 심화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발표함.

- 아세안 주도의 국제다자 메커니즘인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 (ADMM Plus)를 통하여 중-ASEAN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함을 강조

■ 중-ASEAN 자유무역협정 업그레이드 의정서(ACFTA Upgrade protocol) 이행이 시작되었음을 환영하고, 추가적으로 원산지 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 협상 완료를 촉진함으로써 통상확대를 추진함.

- 2020년까지 양자 간 통상규모 1조 달러, 투자 1천 5백억 달러 목표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상호 노력함.

■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협상에 양자가 보다 노력하고, 여타 참여국들의 적극적 협상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RCEP 협상 타결을 추진함.

■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MPAC 2025)과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평가하고 협력하며 중국이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를 통해 관련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을 기대함.

□ 아세안 연계성 강화에는 현재 진행 중인 메콩강유역개발사업(GMS; Greater Mekong Sub-region)과 메콩-란창 협력(MLC; Mekong-Lancang Cooperation)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 아세안은 중국이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IAI; 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 실행계획 III(2016-2020)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바라고 있음.

■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 2017년 8월 아세안과 중국의 외교장관이 채택한 남중국해 행동규범(Code of Conduct) 초안을 발전시켜 행동규범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한 협상에 임할 것을 합의함.

□ 남중국해에서 1982년 유엔국제해양법(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항행과 항공의 자유와 안전, 평화, 안보, 안정을 유지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함.

□ 남중국해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해 남중국해 행동강령 선언(DOC)을 효과적으로 실행한다는 것을 재확인함.

■ 이번 정상회의 결과 양자는 ‘중국-아세안의 인프라 상호연계성 협력 심화하는 것에 관한 공동 성명,’ ‘중국-아세안 반부패 협력 전면 강화에 관한 공동 성명,’ ‘중국-아세안 관광협력 공동 성명,’ ‘미래 10년 남중국해 연안과 해양 환경보호 선언(2017-2027)’ 등의 성과를 도출하였음.

■ 정상회의 결과, 여타 사안으로 중-ASEAN 전략적 동반자관계 비전 2030, 양자 간 기술혁신과 디지털 경제 분야 협력, 내년 싱가포르 회의에 대한 합의 등을 도출하였음.

### 3. 평가와 시사점

■ 중국과 아세안 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통상의 수월성 제고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중국의 아세안 지역에 대한 경제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 중-아세안 경제협력은 중국의 동남아 인프라 투자 확대,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 자유무역협정(RCEP) 추진 등, 투자와 통상제도 양측면에서 가속화될 것임.

□ 다만, RCEP 협상 타결에 이르기까지는 동남아 개별 국가들과 여타 참여국들의 이견 등으로 여전히 장기

간의 협상과정이 요구될 것임.

■ 남중국해 행동규범(CoC) 마련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는 합의를 바탕으로 향후 관련국 간 협상이 시작되겠지만, 행동규범의 내용과 실행방식 등을 둘러싼 이해당사국들, 특히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간의 이견과 입장차가 큰 관계로 최종 타결까지는 상당 기간의 협상과정과 난관을 극복해야 할 것

□ 행동규범이 최종 타결되면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협상 당사국들의 행동을 역으로 구속하게 되므로 참여국들은 매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할 것임.

□ 또한, 이번 아세안 의장국 명의로 발표된 내용 중 남중국해 문제에서 1982년 유엔국제해양법과 여타 국제법을 준수한다는 내용에 대해 중국이 향후 실질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취할지가 관건임. 따라서 남중국해 관련 분쟁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참고문헌

- <http://asean.org/storage/2017/11/FINAL-Chairmans-Statement-of-the-20th-ASEAN-China-Summit-13-Nov-2017-Manila1.pdf> (검색일: 2017년 12월 1일)
- [http://www.fmprc.gov.cn/web/zyxw/default\\_2.shtml](http://www.fmprc.gov.cn/web/zyxw/default_2.shtml) (검색일: 2017년 11월 27일)

#### 알립니다

- CSF 이슈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발간하고 있으며,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에 따릅니다.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
-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CS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